

2012년 서울시 9급 공채 시험 행정법 정답 및 해설

베리타스M고시학원 행정법 대표 교수
마인드맵 행정법 강 태월
질의 응답 : www.taewol.co.kr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요성의 원칙
-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 ③ 신뢰에 의한 사인의 처리
- ④ 인과관계의 존재
- 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정답 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내 용
행정청의 선행조치	공적인 견해 표명(判), 단순 누락이나 착오로는 부족
보호가치있는 신뢰	관계인의 귀책사유(고의, 과실), 부정행위(사기, 강박)이 없을 것
상대방의 처리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처분
손해의 발생	행정청의 후행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공익·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신뢰보호원칙의 예외(다수설), 신뢰보호의원칙의 요건

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 ④ 대집행의 절차로서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반복된 계고의 경우 각각의 계고가 처분성을 갖는다.

- ⑤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은 대집행에 불복하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③

① 원칙적으로 대집행은 공법관계에서의 하명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렇게 보면 틀린 지문이나 예외적으로 대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다.

②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2·3차 계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역시 계고에 따른 법적 효과는 1차 계고로부터 발생하고, 2차·3차 계고는 기한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다(대판 1994.10.28, 94누5144).

③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위의무 전환 규정이 없이 부작위 의무 상태에서는 대집행 불가(유원유지원사건)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6.6.28, 96누4374]

* 이와 더불어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 두고 있을 뿐 부작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전환규범)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④ 대집행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판 1982.5.11, 81누232]

3. 甲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甲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 ②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 ③ 실권의 법리 위반
- ④ 사정변경의 원칙 위반
- ⑤ 비례의 원칙 위반

정답 ①

무관련사업의 제한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의 인·허가 등의 거부·정지·철회를 말한다. 예컨대, 국세징수법 제7조의 국세체납자에 대한 일반적 관허사업의 제한을 들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과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 적합하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과 같은 무관련사업의 제한은 부당결

부금지의 원칙에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다.

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 ②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내린다.
- ③ 신청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④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 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부작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판결을 내린다.

5.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경우에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 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 ③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 ④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이익
- ⑤ 생산자물가상승률

정답 ④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해야 한다. 다만,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6.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① 선취력
- ② 기관력
- ③ 형성력
- ④ 구속력(기속력)
- ⑤ 집행력

정답 ②

기관력은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일사부재리효),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점에 기관력이 생기므로 후소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기관력에 반하게 된다.

7.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 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소송심사위원회가 징계협약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건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을 한 경우에 소청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 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원처분이 수용재결이고 후행처분이 이의재결이다. 이때 현행법은 원처분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인 것이 아니다.

8.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 ②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량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는다.
- ④ 자기구속력이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정답 ⑤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근거로서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는 견해(형성된 행정관행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평등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형성된 행정관행에 반하는 작용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점)가 있는데, 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허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9. 다음 중 수용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 ① 사법적 책임
- ② 위법침해
- ③ 결과책임
- ④ 고의적 침해
- ⑤ 위법-무책의 책임

정답 ③

수용적 침해는 간접적 비의도적 침해로서 의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논의이다.

10.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 ⑤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 ① 행정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다.
- ②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다.
- ③ 우리나라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해석준칙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으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⑤ 조례와 규칙도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11. 행정행위의 분류상 서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판례)

- ① 혼합적 허가-석유판매업허가
- ② 복효적 행정행위 - 공해공장 설치허가
- ③ 재량행위-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 시행허가
- ④ 물적일반처분-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위
- ⑤ 요식행위-행정심판의 재결

정답 ①

①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다. 판례 역시 석유판매업허가사건에서 ①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② 양도인의 아들이 부정취탈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주유소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2.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조직법상의 근거는 요구된다.
- ④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아동의 건강상담은 조성적 행정지도로 볼 수 있다.
- ⑤ 대법원은 행정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정답 ②

② 사전통지는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인데,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침익적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지도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

13.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하명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 일반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 ③ 허가의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실효되고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 ④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가는 유효하다.

정답 ②

- ① 하명은 적법요건으로서 위반시 위법하나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 ② 허가는 기속이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다.
- ③ 갱신은 새로운 행정행위가 아니라 기존 행정행위의 연장이다.
- ④ 특허와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출원 또는 신청없는 특허는 무효이다.
- ⑤ 인가는 하자 치유력이 없으므로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가 있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14. 다음 중 판례상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 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
- ③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이익
-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이익

정답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은 반사이익으로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15. 다음 중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 ②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주민
-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 ④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고시에 대한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
- ⑤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

정답 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나 구내 소매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3.27, 2007두23811]

* 기존의 담배 일반소매업자가 신규 구내소매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없음(양자간에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

1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과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침해적 처분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해당 질문은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이다. 이유부기 결여에 대해 필수적인 이유부기를 아예 결여하면 무효로 보는 견해와 취소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통상 이유부기 결여를 취소하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4번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17.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 ① 한의사면허의 법적 성질은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이다.
- ②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한의사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을 갖는다.
- ③ 과세처분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당초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 설립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인접한 대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⑤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 ②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한의사면허는 허가이므로 경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 ③ 당초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④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 허가를 취소한 들 원상회복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이라 원고를 승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이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 (나) 무허가 건물등 대장삭제행위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설치상의 관리관계에 변동은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생성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이다.

- ① 5개
- ② 4개
- ③ 3개
- ④ 2개
- ⑤ 1개

정답 ①

모두 옳은 지문이다.

19.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 ③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약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계획재량에 대한 실체적 통제법리인 형량명령이론에 의할 때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를 오형량이라 한다.
- 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입장에도 양자 사이에 차이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④ 특정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형량흠결이다.

계획재량의 통제원리		형량명령 : 행정계획을 함에 있어 관계 이익을 모두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이때 형량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는 이론(주로 공익과 사익 형량)
3단계 모델		① 조사단계 : 계획사항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 사익상호간의 조사 및 확인 ② 평가단계 : 조사된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 및 중요도에 따른 경중의 평가 ③ 비교·결정단계 : 계획목적과 이해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비교·결정하는 단계)
형량하자 유형	형량조사의 하자	관련된 공익 또는 사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
	오형량	형량을 행하기는 했으나, 사적 동기가 개입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형량이 특정 이익만을 위한 경우 00. 국가7급
	형량의 해태	전혀 형량을 행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탈락)08. 지방9급
	형량의 흠결	형량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08. 국회8급

20. 다음 중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옳은 것은?

-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
- ②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
-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 내역
- 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정답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나머지는 모두 공개대상정보로 판결되었다.